

# 「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」

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, 농축수산물과 식품의 생산·유통단계 전반에 걸쳐 안전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식생활·영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」을 마련하였으며, 이 대책을 12월 27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

## 목표

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

## 전략

- 안전을 최우선으로 농축수산물·식품 생산·유통체계 개선
- 친환경·HACCP 등 인증제도 신뢰회복
- 식품안전 수준제고 및 식생활 영양관리 강화
- 식품안전관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·상시관리

## 추진과제 : 4대분야 20대과제

### 1. 축산(가금)산업 선진화

- ①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
- ② 현장 맞춤형 방제 여건 조성
- ③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혁신
- ④ 계란·닭 유통체계 개선
- ⑤ 가축질병 예방체계 강화

### 2. 인증제도 개선

- ⑥ 안전성 중심으로 인증기준 강화
- ⑦ 인증기관 부실인증 예방
- ⑧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

### 3.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

생산·출하

- ⑨ 유해물질 기준 강화 등 사전예방생산체계 구축
- ⑩ 농약 등 관리 및 지도·점검 강화
- ⑪ 도매시장 등 위생환경 개선

유통·소비

- ⑫ 이력추적제 확대 및 위해식품 차단
- ⑬ 어린이기호·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
- ⑭ 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 강화

영양·위생

- ⑮ 급식 등 위생관리 개선
- ⑯ 취약계층 식생활·영양 안전망 확충
- ⑰ 국민 식생활·영양관리 지원

### 4. 관리체계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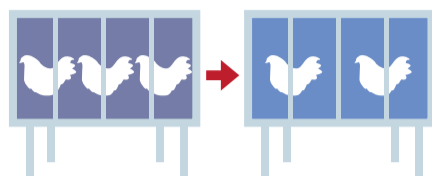
- ⑱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
- ⑲ 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
- ⑳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

# 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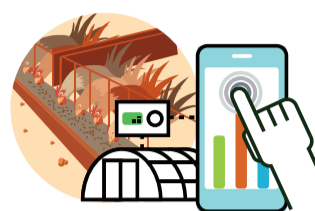
## 축산(가금) 산업 선진화

###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

공장형 사육, 밀집·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


① 산란계 사육밀도 상향 (0.05 → 0.075㎡/마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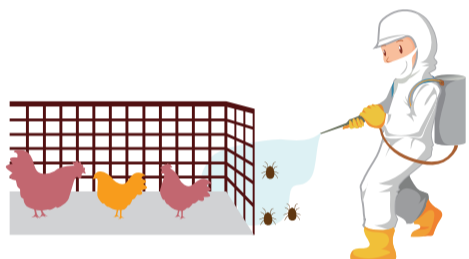
② 조명 10lux 수준유지 및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로 관리



③ 축사시설 개선 보조(30%) 지원 및 동물복지 직불금 지급

### 현장 맞춤형 방제여건 조성

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한 방제기술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고,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약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

① 전문방제 시범사업 실시 및 전문방제업 신설



② 모든 산란계 농가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 보급



③ 현장 사용 가능한 허가된 약제 신속 보급

###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혁신

계란 안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,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


①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실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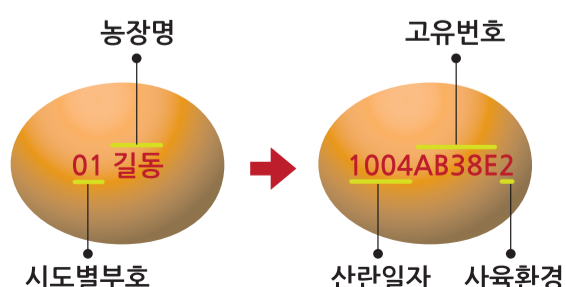
② 전통시장 등 유통사각지대 점검 강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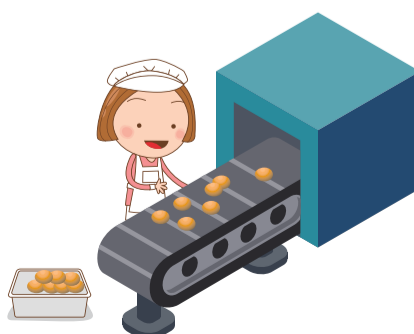
③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의 축산업 허가취소

### 계란·닭 유통체계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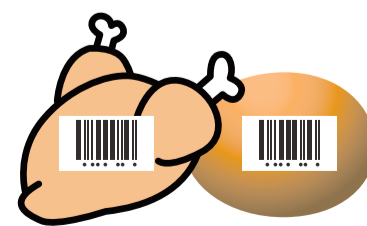
계란의 생산·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,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


① 난각에 산란계 사육환경과 산란일자 의무 표시



② 가정용 계란은 선별·세척 유통 의무화



③ 계란·닭·오리 이력추적제 도입

# II

## 인증제도 개선

### 안전성 중심으로 인증기준 강화

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



① 안전관리 기준(GAP·HACCP) 확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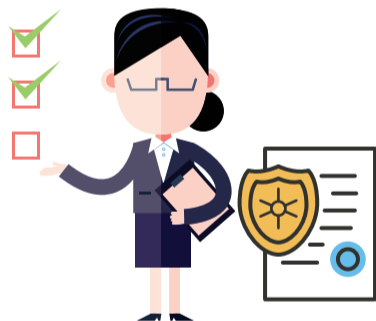
②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·농약 추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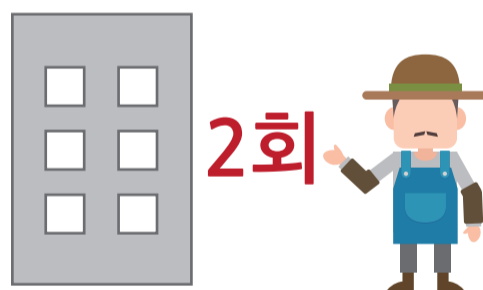
③ 축산농장 HACCP 인증 의무화 (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적용)

### 인증기관 부실인증 예방

부실인증을 사전 차단하고, 역량평가를 통해 건실한 인증기관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.



① 인증기관의 심사원 자격에서 공무원 자격 불인정



② 인증신청 시 동일기관에 연속인증 2회로 제한



③ 역량평가제도 도입 및 부실기관 퇴출

###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

인증농가 책임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인증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.



① 안전성 기준 위반 즉시 인증(등록) 취소 (친환경 및 HACCP 인증 농어가)



② 친환경 및 HACCP(양식장) 안전성 검사 2배로 확대



③ 모든 인증농어가 대상 교육 강화

# I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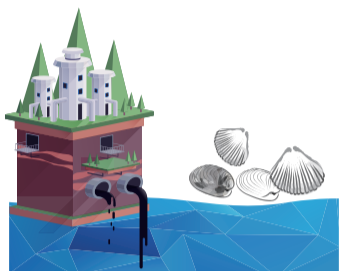
##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

### 농·수산물 생산·출하 단계 안전관리 강화 및 사전 예방적 생산체계 구축

농·수산물 생산·출하 단계의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, 양식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생산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.



①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 도입 및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



② 패류 생산해역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



③ 양식장 주변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적 양식시스템 구축



④ 위·공판장 안전기준 마련 및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확충

### 유통·소비단계 소비자 보호 및 권리 강화

국민 불안감이 높은 학교 주변 판매식품,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,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.



① 과자, 초콜릿 등 어린이기호식품 HACCP 의무 적용



②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통관보류조치



③ 다수의 식품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'집단소송제' 도입



④ 소비자가 요청하는 해외직구제품 검사

### 국민 식생활·영양 관리 강화

고령화와 비만을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국민 식습관 개선 및 영양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.



①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 비만예방 및 과일간식 제공



② 어린이·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원



③ 저소득층 임산부·영유아의 영양관리 지원 확대

# IV 관리체계 정비

##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

부처간 협업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 수립·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.



① 실시간 검사 정보 공유를 위해 식품안전정보시스템 개편



② 검사 기준 및 항목 설정시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 의무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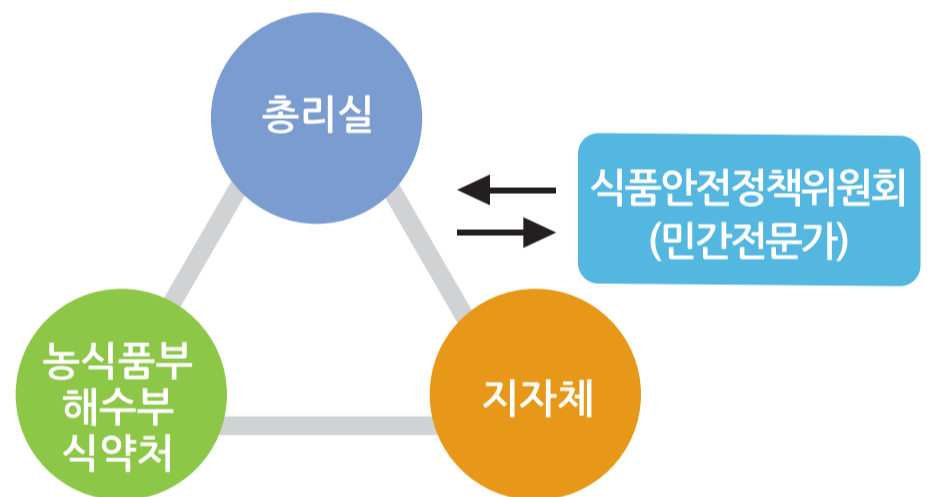
③ 위해물질 발견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

## 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

식품안전 사고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,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범정부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

① 표준매뉴얼 수립 및 개발부처 매뉴얼 정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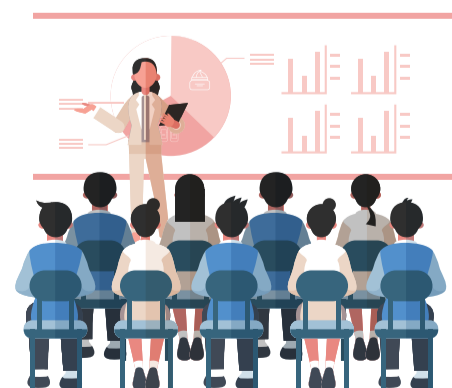
② 총리실 식품안전상황팀 및 부처 전담팀 구성 운영을 통한 정부 단일대응체계 구축

##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

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개편하고, 정부가 아닌 국민중심의 소통으로 전환하겠습니다.



① 위원회의 정책 조정·심의 역할 강화 및 위기관리 중심으로 개편



② 소비자와 소통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민(수요자) 중심으로 소통 전환